

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방의 경제제재와 러시아의 대응

(산업연구원 김학기 연구위원)

1.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가능

-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작전 목적
 - 비무장화, 비나치화, 범죄자 처벌 (푸틴, 2월 24일)
-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평화협상 타결이 쉽지 않음
 -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, 군사작전은 계속, 돈바스 학살자 책임 규명(비나치화)
 - 러시아를 위협하는 우크라이나의 군사 시설 파괴해야(비무장화)
 - 비무장화는 평화협정에도 반드시 관련 조항을 포함시켜야
- 우크라이나 중립국화, NATO 비가입 문제는 어느 정도 합의
- ‘비무장화’, ‘비나치화’ 문제 타협 쉽지 않을 것
- 러시아-우크라이나 온라인 평화협상 중
 - 우크라이나 대통령, 러시아와 협상 합의사항 국민투표 가능(돈바스, 크림), 최후통첩은 반대(3월 21일)
- 미국과 EU, 우크라이나에 무기, 장비 지원 계속 확대

- 푸틴 러시아 대통령, ‘돈바스 특별 군사작전’ 관련 연설문 주요 발언 (2월 24일)
(전문 참조 <https://blog.naver.com/paxeurasia/222656547604>)
- 30년 동안 우리는 유럽의 평등하고 불가분의 안보 원칙에 대해 NATO와 합의 위해 참을성 있게 노력. 우리의 제안에 대해 냉소적 속임수, 거짓말, 압력, 공갈, 무례한 말투에 끊임없이 직면
 - NATO는 계속 러시아쪽 이동(동쪽으로 1인치도 확장 않을 것 약속 위반), 러시아 계속 위협
 - 서구 블록 전체가 "거짓의 제국"
- 2021년 12월 유럽의 안전보장과 NATO 비확산 원칙에 대해 다시 한번 합의 시도
 - 모든 것이 헛된 것, 미국은 협상 필요 생각지 않고 자신 목적만 추구, 러시아 이익 무시
- 미국과 동맹국들의 ‘러시아 봉쇄 정책’은 러시아의 존재와 주권에 대한 실질적 위협, 레드라인 지났다.
- NATO는 목표 달성 위해 우크라이나의 극단적 민족주의자와 네오나치 지원
- 8년 동안 우크라이나 정권에 의해 왕따와 집단 학살의 대상이 된 돈바스 사람들 보호, 유혈 범 죄자들 처벌할 것
- 2014년에 러시아는 자신을 "나치"라고 부르는 사람들로부터 크림반도와 세바스토폴 주민을 보호해야 했다.
-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나라와 국민을 위협하는 자들은 러시아의 대응이 즉각적이며 역사상 경험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.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다.

2. 미국, EU, 일본 등 경제제재 지속적 확대

- 전쟁 양상에 따라 미국과 EU 등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는 강도를 더해감
- 미국 중심의 러시아 경제제재는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러시아 첨단기술 분야, 군수산업 분야 등에 초점 (기존)
 - 러시아의 강국화 방지와 경제 규모 확대 억제에 집중
- 러시아의 세계적 규모의 원자재 공급원 등 산업 전반에 대한 제재로 점진적 확산
 - 에너지 등 서방 경제에 필요한 핵심 원자재 등은 예외로 두었지만, 변화 조짐
 - 항공·우주, 에너지 분야 투자 및 기술 제공 금지와 더불어 니켈, 팔라듐, 알루미늄 등
- 예, 호주는 3월 20일, 러시아연방의 가장 중요한 수출 제품 중 하나인 알루미늄 생산 분야 제재
 - 알루미나, 알루미늄 광석, 보크사이트의 러시아 수출 즉시 금지
 - 러시아 자동차, 무기산업, 항공 우주, 엔지니어링, 건설 부문에 부정적 영향
 - ▶ 미국 원전업계, 러시아산 우라늄 공급에 제재를 가하지 않도록 미 당국에 영향력 행사
- 전면적인 무역 금지 주장도 제기되기 시작

2-1. 미국의 경제제재

- 2월 21일, DPR 및 LPR에 자금 조달, 투자, 교역 금지
- 3월 8일, 러시아 석유, 가스 및 에너지의 모든 수입 금지, 러시아 에너지 부문에 대한 신규 투자 금지
 - 석유 및 석유 제품, 석유 연료 및 오일, 증류 제품, 가스, 석탄 및 석탄 제품 모두 해당
- 3월 11일, 러시아에 대한 미국 달러 지폐의 수출, 판매 및 공급 금지
 - 러시아 경제의 모든 부문에 대한 투자 제한 가능
- 3월 20일, 미국은 더 많은 은행과 러시아 경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부문, 특히 에너지와 관련된 부문까지 제재를 확대 가능, 중국에 대해서도 경고

2-2. EU의 경제제재

- 2월 25일, 개인 및 핵심 산업 기관들에 대한 경제제재 패키지 부과(푸틴 대통령 등 670명, 법인 113개)
 - 대통령 행정부, 국방부, 외무부 및 기타 정부 기관을 포함
 - 러시아의 64개 핵심 기관, 군수산업, 에너지, 항공기 제조 기업 등 금융 및 기술 부문 제재
- 2월 26일, 제재 대상 모든 러시아 은행들을 SWIFT에서 제외, 러시아 은행 자산 동결 예고
- 3월 15일 (4차 제재 패키지): 에너지 부문 신규 투자 금지, 러시아 철강 및 철금속 제품 수입 금지, 사치품 수출 금지, 국영회사와 거래 금지
 - 러시아 대기업 및 지도자와 유럽 기업과의 거래 금지
 - 에너지 부문 신규 투자 및 신규 대출 금지: 석유 및 가스 생산, 가스 액화, 재기화, 정유, 러시아 내 석유 제품 및 가스 유통, 발전소 건설 포함
 - ▶ 예외, 민간 원자력 및 에너지 운반선 운송 제재 대상에서 제외
 - ▶ 러시아에서 유럽으로의 탄화수소 운송 예외
 - 신규 투자 금지와 함께 에너지 부문 특정 장비(파이프, 시추 장비, 부유식 시추 플랫폼 등)의 러시아 공급 금지 조치 연장
 - 기존: 심해, 북극 및 셰일 오일 탐사 및 생산 기술 제공 금지, 이제는 모든 프로젝트에 제재
 - 철금속 및 철금속 제품의 EU 수입 금지 조치, 연간 약 33억 유로 상당에 영향

- 사치품 공급 금지
 - ▶ 캐비어, 와인, 시가, 향수, 핸드백, 고가의 의류 및 신발 등 300유로(약 40만원 부터)
 - ▶ 보석 및 고가의 가전제품(전자레인지, 냉장고, 토스터기, 커피머신, 게임기 등 €750(약100만원) 이상
 - ▶ 자동차 €50,000(약 6,700만원) 이상
 - ※ 미국도 러시아에 대한 사치품 공급 금지, 연간 5억 5,000만 달러 상당
- 4월 15일부터 모든 러시아 고객에 대한 유럽 신용 평가 기관의 서비스 제공 금지
- 러시아 국영 기업과의 모든 종류의 거래 금지
 - ▶ 결과적으로 티타늄, 알루미늄, 구리, 니켈, 팔라듐, 철광석뿐만 아니라 EU에 러시아 화석 연료(석탄, 석유 및 가스) 공급 위한 거래도 단절 가능
 - ▶ 알루미늄, 팔라듐 등 제재 다소 유보
- EU의 4차 제재의 주요 방향: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의존하고 있는 경제적, 물류적 기반에 타격을 주는 것(EU 외교 책임자, Josep Borrell)
- EU 시장에서 러시아의 상품과 서비스를 최혜국 대우 제외

- 유럽연합(EU)은 러시아 석유에 대한 제재를 미국처럼 쉽게 가할 수 없음
 - 제재에 앞장서는 폴란드도 주장
- 개별 기업 거래 중단(사례)
 - 노르웨이 석유가스회사 Equinor(구 Statoil), 러시아산 석유 및 석유제품 거래중단(3월 15일)
 - ▶ Equinor는 러시아의 합작 투자에서 철수, 신규 투자 중단(2월 28일)
 - 세계 최대 유전 서비스 기업 중 하나인 Schlumberger는 러시아에서 추가 투자 및 기술 구현 중단(3월 18일)
- 폴란드 총리,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EU 제재에 완전한 무역 봉쇄 추가 제안
 - 러시아 선박의 입항 금지, 육로 무역 금지, 폴란드~벨라루스 및 러시아 화물 트럭 운송 봉쇄 등 제안
- 5차 제재 패키지 (검토중)
 - 리투아니아를 포함한 발트해 연안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석유 금수 조치를 주장
 - 독일은 유럽의 에너지 가격이 높기 때문에 성급한 조치를 취하지 말라고 경고
- 3월 24~25일, 유럽연합(EU), 나토(NATO), G7 정상 등 브뤼셀 일련의 정상회담
 - ▶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 논의 예정
 - ▶ 러시아로부터 석유 공급 제한 등 에너지 문제, EU 국가들 사이에 날카로운 이견

2-3. 일본의 경제제재

- 2월 23일,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인민공화국과의 수출입 금지, 러시아 국제 발행 금지
 - Rosoboronexport, Rostec, FSB 및 러시아의 49개 기업과 기관에 대한 수출 제재
- 3월 15일, Rosoboronexport, Rostec, FSB 및 러시아의 49개 기업과 기관에 대한 수출 제재
 - Otkritie Bank, Novikombank, Sovcombank, VTB, Rossiya Bank, Promsvyazbank 및 VEB.RF의 자산 동결
 - 러시아에 대한 정유 장비 및 반도체 수출 금지
 - 65명에 대해 개인 제재, 자산 동결과 이들과의 금융 거래 금지
- 3월 16일, 러시아에 대한 최혜국 대우 금지 결정(미국, EU, 영국과 동일)
 - 수출이 금지된 상품 및 기술 목록 300개로 확대
 - 제재 목록: 반도체, 해상 및 항공 보안 장비, 통신 장비, 통신 장비, 무기를 포함한 군수품, 폭발물, 방탄복 등과 함께 원자력 관련 장비 및 제품, 화학공업제품, 각종 센서, 소프트웨어 등
- 3월 17일, 일본과 러시아연방 간의 8대 경제협력 관련 새로운 과제 불가능 발표
 -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, 국방차관 8명 등 개인 15명
 - Rosoboronexport, Russian Helicopters, United Aircraft Corporation(3개 모두 Rostec의 산하) 등 항공 분야 기업들 제재

3. BRICs 국가 동향, 친러시아 의견 표출

□ 중국

-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중국의 러시아 지지 발언 정도가 점점 확고해짐
- 3월 15일, 중국 외교부장 왕이, 중국은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 회담을 진행하며 인도주의적 위기를 예방하는 데 나름대로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할 것
- 3월 17일, 중국 상무부 대변인 Gao Feng, 중국은 세계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미국의 반러 제재에 반대하고 국영 기업의 이익을 보호할 것, 국제법 규범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제재에 반대
- 3월 18일, 시진핑 주석, 바이든과의 전화회담, 미국과 중국은 양자 관계를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적 책임을 지고 세계 평화와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
- 3월 20일, 중국 외교부장 왕이, 중국은 외부 압력을 용납하지 않으며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에 반대한다, 중국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문제의 본질에 근거한 독립적인 판단을 계속할 것

□ 인도

- 러시아와 350만 배럴의 석유를 대폭 할인된 가격에 수입 협정 서명(3월 16일)
- 3월 17일, 인도 외무부 대변인, 에너지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으로 채우고 있는 인도는 러시아를 포함해 모든 석유 공급 옵션을 고려
- 석유 및 천연가스 장관, 루블과 루피 결제를 통해 낮은 관세로 원유를 판매하려는 러시아의 제안 검토
- 인도 수입업자로부터 받은 루피를 사용하여 인도에서 상품을 구매, 인도 수출업자는 러시아가 러시아 수입품에 지불하는 루블을 사용하는 특별 결제 시스템 구축 계획 (탈 달러화)
- 일본의 반러시아 제재 동참 요구 거부(3월 21일)

□ 브라질

-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, 모스크바 방문하여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핵잠수함 프로젝트 도움 요청(2월 16일)
-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러시아를 비난하지 않는다(3월 17일)

4.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

-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심화될 것이라는 경고 확대
 - 러시아가 에너지, 식량, 자원 강국이라는 점에서 서방의 경제제재는 한계가 있고 서방 역시 큰 피해를 볼 수 있음
 - 핵잠수함, 극초음속 미사일, 신형 전투기 개발 등 러시아의 군사력 역시 최근 수년간 크게 확대되어 NATO와의 직접적인 대결에 대해서도 물러설 뜻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음

- 상호 경제 보복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로 세계 경제 타격

- 경제 성장 영향

-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
 - 세계 GDP 성장률이 1%포인트 하락하고 물가상승률은 2.5%포인트 상승할 것
 - 이 위기는 이미 에너지, 식품, 특정 금속 가격 상승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
 - OECD는 지난해 12월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22년 말까지 4.5% 전망, 3월 초로 예정됐던 정기 전망치 발표를 '불확실성 증가'로 인해 취소

○ IMF

- 에너지 자원 교역 조건이 변경되고 공급망이 재건되고 지불 네트워크가 분할, 금 및 외환보유고 구성 재고
-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갈등은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 및 지정학적 질서를 근본적으로 교체

□ 에너지 문제

○ EU는 러시아로부터의 천연가스 공급을 2/3이상 줄이려는 목표 추진

- 목표 달성 위해서는 다른 국가로부터 500~600억 입방미터의 가스를 조달해야, 사실상 불가능
 - ▶ 현재 러시아에서 유럽으로의 가스공급량은 어느 나라로도 대체 불가(카타르 에너지부장관)
 - ▶ 유럽의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시 유가 300달러로 급증(러시아 노박 부총리)

□ 러시아 원자재 공급 축소

○ 건축자재 분야, 역청, 철강 및 철강 제품

○ 주철, 니켈, 티타늄 등 원자재

○ 대체 공급원은 존재하지 않으며, 대체 원료를 사용하려면 긴 테스트 기간과 승인 절차가 필요

○ 러시아산 목재, 펄릿 공급 중단

□ 식품 가격 인상과 식량 위기

○ 러시아는 비료 및 기타 농약의 주요 생산국

- 미국의 톤당 비료가격, 지역에 따라 510달러에서 1,508달러로 3배 증가

○ 농업 분야에 어려움이 가중

- 식품 가격 상승

○ 러시아의 식량 무기화에 대항하기 위해 육류 소비 감축 주장(3월 19일, 독일 농무부 장관)

□ 물류 비용 증가 (항공, 선박)

○ 러시아 영공 사용 금지로 인해 19개국의 외국 항공사들이 일주일에 최대 3,750만 달러를 추가로 지출(러시아 연방항공운송국 발표, 3월 19일)

- 항공권 가격과 물품운송비 등의 물가상승으로 여객과 화주 부담 불가피
- 늘어난 비행 거리로 인해 평균 이동 시간 증가

○ 선박 입항 금지(영국, 폴란드 등)

□ 미국, EU 등 내부 비판 목소리

- 반러시아 제재로 바이든 행정부가 세계 금융 시스템은 물론 미국 자체를 파괴
(폭스 뉴스, 3월 11일)
 - 인플레이션 가속화, 소득 불평등 심화
- 유럽 각국, 경제의 탈러시아화로 물가 상승, 인플레이션 대책 강구
 - 에너지 가격뿐만 곡물 가격 폭등으로 유럽과 북미의 노동계급이 대가를 치르게 될 것
-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정책과 우크라이나 상황이 미국을 조기 쇠퇴로 이끌 것이라고 주장
(6선의 영국 전 국회의원이자 노동당 대표를 지낸 깬로웨이, 3월 17일)

5. 경제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책

5-1. 러시아의 주요 과제

-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러시아 정부는 경제정책에 대해 푸틴 대통령과 화상회의 (3월 10일)
 - “지난 2주 동안 서방 국가들은 사실상 러시아에 대한 재정적, 경제적 전쟁을 시작했다. 서방은 러시아에 대한 재정적 의무 불이행을 선언했고 우리의 금과 외환보유고를 동결했으며 대외 무역과 상품 수출을 모든 수단으로 중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(실루아노프 재무장관 진단)
 - 2020~2021년의 "팬데믹" 경험을 기반으로 대부분의 위기 방지 패키지 이미 실행중
- 경제제재 속 러시아 경제 전망 바탕으로 위기 대응책 강구
 - 3월 10일 러시아 중앙은행 발표(경제학자 대상 설문 조사, 3월 1~9일에 18명)
 - 러시아의 GDP: 2022년 8% 감소, 2023년 1%, 2024년 1.5% 성장
 - 인플레이션: 2022년 연 20%, 2023년 8%, 2024년 4.8%
 - 기준금리는 연 7% 수준으로 이동할 것으로 가정(현재 20%)
 - 달러 환율 추정치는 달러당 100~110 루블 수준
 - 실질 임금이 2022년에 10%, 2023년에 1.5%, 2024년에 2% 증가
 - 실업률: 2022~2024년에 7~9%로 추정

-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시장에서 외국 대기업의 철수 또는 활동 중단을 중요한 위협으로 판단
(관련 상품 가격 상승, 제품 품질)
 - 사업 중단 또는 철수 이유: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따른 거래 위험, 환율 변화, 가격 인상에 의한 수요 감소, 자재 공급 등 물류 문제 등
 - 철수한 외국기업 자산의 국유화 논쟁, 정치 문제화 가능, 국유화가 아닌 외부 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한 관리 형식 검토
-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한 외국 기업, 2022년 여름경 러시아로 복귀 예상
(특히 경쟁자가 쉽게 교체될 수 있는 분야)
 - 러시아 금융 시장의 추가적 안정화가 외국 기업의 복귀에 기여할 것
 - 러시아 금융시장 붕괴 없음. 루블 회복세
 - ▶ 3월 12일 달러당 120루블, 3월 18일 104.8루블, 19일 104루블, 22일 104.7
 - ▶ 3월 11일 120.3루블 기록 후 6일 연속 하락
 - 수출은 일부 분야 감소했지만, 여전히 계속
- 재정 및 사회 정책의 조정 과제
 - 탄화수소 가격 상승이 소비 감소와 비석유 및 가스 수입 감소 상쇄할 것으로 기대(재무부)
 - 빈곤 대책, 자녀가 있는 가족 지원, 실업 대책 등 사회적 지원 대책

5-2. 러시아의 위기 대응책

○ 정부 차원의 제재 대응 본부 운영

-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, 안드레이 벨루소프 제1부총리, 세르게이 소비아닌 모스크바 시장 참여

○ 국민 안정 대책

- 최저임금, 최저생계비, 공공부문 급여, 연금을 포함한 모든 사회적 혜택을 인상할 예정(3월 16일, 푸틴, ‘러시아연방 구성 기관의 사회적, 경제적 지원에 관한’ 회의)
-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말에 빈곤과 불평등 수준 감소 목표 달성

○ 금융시장 안정 대책

- 러시아 중앙은행은 2월 28일부터 기준금리를 연 20%로 10.5%포인트 대폭 인상
- 재정 및 가격 안정 지원하고 국민들의 저축을 감가상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(국민 대규모 예금 인출, 금리인상후 다시 예금)
- 국내 은행에는 충분한 지불용 담보 확보
- 카드 관련 국가 내 모든 거래 계속 원활하게 진행(해외 결제만 문제)
- 금 매입 재개(2월 1일 기준 러시아의 금 보유량 1,323억 달러)

- 투자자 유출 및 러시아 주식시장에서 자금 인출 방지 조치
 - ▶ 중개인에 의한 러시아 증권 판매 금지
 - ▶ 전문 금융시장 참가자에 의한 증권 및 배당금 등 소득 인출 금지
 - ▶ 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러시아 자산 매각 금지
 - ▶ 증권시장 안정을 위해 재무부가 국부 기금에서 최대 1조 루블 투입
- 외화 부족 사태를 막고 루블 환율 방지 조치
 - ▶ 무역에 종사하는 러시아 기업은 외화 수입의 80%를 국가에 판매
 - ▶ 현금 수출 제, 3월 2일부터 현금으로 1만 달러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다른 외화로 인출 금지
- "통화 규제 분야에서 러시아연방의 재정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적인 임시 경제 조치에 관한" 법령에 서명(3월 18일, 푸틴 대통령)
 - 기존의 재정적 안정 보장하기 위한 조치
 - ▶ 러시아 거주자는 외국 기업의 재산에 대한 지분, 기부, 공유 제공 금지(12월 31일까지 중앙은행의 허가)
 - ▶ 9월 1일까지 제재 대상 은행과 러시아 법인 간의 협정에 따른 외화 의무는 루블 결제시 정당하게 이행된 것으로 간주

5-3. 러시아의 향후 경제 대응책

○ 국내 시장 보호와 고용 유지가 제재 대응책의 주요 목표(미슈스틴 총리)

- 제재 하에 러시아 경제의 안정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 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
(3월 15일, 총리)
- 약 1조 루블 상당의 100개 이상의 프로그램 검토
 - ▶ 우선순위 실행 계획, 매우 유연하며 상황 전개에 따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, 단계적으로 시행
- 경제 자유화와 유연성 보장
 - ▶ 비즈니스 내부 제한 제거, 기업가에게 더 많은 자유 제공
 - ▶ 생산 및 물류 연결을 재구성, 원활한 기업 운영
- 유라시아경제연합(EAEU)의 파트너 국가들과 공동 조치 제안
 - ▶ 필요한 자원과 상품 최대한 공급

○ GDP 성장 유지 및 경제 안정화 조치

- 서방의 무역 및 금융 제재로 생산 및 물류 병목 현상
- GDP는 향후 감소, 주로 공급측 요인
- 러시아 정부와 중앙은행의 조치를 통해 경기 침체의 규모 완화
- 경제 회복은 주로 새로운 여건에 대한 조정 정도와 속도에 달려 있음.
- 유라시아경제연합(EAEU) 회원국에 대한 곡물 수출을 6월 30일까지 잠정 금지
- 백설탕과 원당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8월 31일까지 금지
- 사회적으로 중요한 상품의 가격 고정 검토

○ 러시아 경제는 인플레이션 상승을 동반하는 대규모 구조 조정 단계에 진입

○ 기준금리를 연 20%로 유지 결정(중앙은행, 2022년 3월 18일)

- 금융안정 뒷받침, 물가상승 억제
- 2024년에 연간 인플레이션을 4%로 되돌릴 수 있는 여건 조성
- 러시아연방의 은행 시스템이 실패 없이 작동하고 있으며 유동성 상황 안정화 발표
(3월 18일, 나비울리나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)

○ 디폴트 문제

- 러시아 정부는 디폴트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오랜 기간 준비
- 러시아가 외화보유고는 약 6,400억 달러, 그중 약 3,000억 달러가 제재로 동결(재무장관)
- 디폴트는 외국에 의한 인위적 조치에 불과
- 재무부는 비우호적 국가에 대한 부채를 루블로 지불 발표

○ IT 부문 지원

- 첨단 기술 기업은 3년간 소득세 납부와 검사 면제
- 연 3%로 대출, IT 전문가에게 우대 모기지 제공, 27세까지 임대 유예
- 국가 중추기업 목록에 무선 전자 설계국 포함(Baikal 및 Elbrus 프로세서 개발 회사)
- 제재로 인해 러시아에 칩 공급을 중단한 대만 TSMC에서 중국 공장으로 생산 이전

○ 중소기업 지원

- 개별 기업가와 소기업에 대한 정기 점검 유예
- 농업인 우대 대출

6. 경제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보복

○ 서방의 경제제재에 대한 보복 조치 검토 중

- 러시아의 보복 제재는 식품 금수 조치, 식품 및 의약품을 포함한 상품 수입 제한, 수입 대체 개발, 러시아의 로켓 엔진 및 희소 금속 수출 중단, 비우호 국가 기업과의 협력 종료, 기업 정보(재무제표, 수혜자, 이사회 구성원, 주요 거래 등) 비공개, 러시아를 떠난 외국 기업 자산관리 등의 대응책 검토

○ 정부 부처 간 조율 중인 러시아 측의 보복 제재도 한국 등 ‘비우호 국가’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음

○ 크레믈린 당국은 EU의 러시아 석유 공급에 대한 금수 조치 결정할 경우 심각한 영향 경고

- 유럽의 에너지 균형을 악화, 세계 시장에 심각한 영향, 모든 사람에게 타격(TASS, 2022. 3. 21)

○ 러시아, 일본과의 평화조약 협상 및 쿠릴열도 협력 중단, 일본에 보복 조치

- 러시아측은 현 상황에서 일본과 평화조약 협상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.
- 공개적으로 비우호적 입장을 취하고 자국의 이익을 해치려는 국가와 논의하는 것 불가능
- 러일 협력의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호혜적인 협력과 좋은 이웃을 발전시키는 대신에 반러적인 길을 고의로 선택한 일본에 있다.

7. 장기 전망에 기반을 둔 대응책 강구 필요

- 우크라이나 전쟁은 패권 경쟁의 일부분
- 세계 패권 경쟁 속에서 전개되는 경제제재와 러시아 경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한 대응 방향 강구
 - 에너지, 식량, 군사력 강국, 서방과의 경쟁에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
-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도 러시아와 중국 대 미국과 EU 등 서방 국가 간 패권 경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
 - 세계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 국익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이 필요함
- 우크라이나 사태 종료 후 한-러 경제협력 회복 및 확대를 위한 장기 대응책 강구
 - 경제제재 속에서도 러시아의 경제정책 방향에 맞는 대응책 미리 준비
 - 향후 러시아는 수입대체와 러시아 국내 산업 구조조정 정책 가속화 예상
- 러시아는 서방과의 관계 수립을 시작하지 않는다고 발표 (러시아 외무장관 라브로프, 3월 19일)

- 지속적인 인적 교류 유지 필요(학술, 연구, 관광, 문화, 스포츠 등)
 - 4차산업혁명 관련 핵심 기술, 첨단 산업 기술 분야 중심

○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발언 참조(3월 7일)

- 가까운 시일 내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을 것
- 푸틴 대통령이 휴전을 거부하기 때문에 협상이 어렵다. 적대 행위가 단기적으로 계속될 것
- 우리는 러시아와 계속 대화할 것이다. 우리는 러시아와 전쟁 중이 아니다.
- 언젠가 우리는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야 한다. 의견 차이 불구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.
- 우리는 항상 러시아와 러시아 국민을 존중해야 한다.
-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모든 유대를 유지하는 것이다, 우리는 러시아 및 벨라루스 국민과 계속 대화해야 한다.
- 기술 커뮤니티, 비정부 조직, 문화계, 과학계 대표자들의 도움을 받아 이 일을 해야 한다.